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통일을 주제로 교육·문화예술·IT 등 다양한 영역을 결합한 종합적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통일관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통일관 운영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지역	통일관	주 소	개관일	운영주체
강원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고성통일전망대	1988.6.16	(주)고성통일전망대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1996.8.14	양구군청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20-1	1990.12.15	철원군청
수도권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자유회관내)	1994.12.15	자유총연맹(인천지회)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1992.9.8	(주)동화진흥
	서 울	서울 구로구 궁동 35 서서울생활과학고	2008.10.29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충청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 과학 공원내)	2001.8.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413 청주랜드	1993.2.23	청주시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2007.4.5	자유총연맹(충남지회)
호남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316-11 (화정근린공원내)	19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영남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1989.1.30	자유총연맹(부산지회)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자유회관내)	1998.4.29	자유총연맹(경남지회)
제주	제 주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968-2(자유회관내)	1993.12.18	자유총연맹(제주지회)

제4절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다.

매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발간·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자료 요청자 등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오래전에 제작되어 유지해오던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내용과 구성을 현재의 남북관계와 성숙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통일교육 콘텐츠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크게 보완하였다.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 균형적 시각에서 재편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통일교육 콘텐츠의 중심개념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먼저, 한반도의 정확한 현실과 북한이해를 바탕으로 기본교재를 비롯한 각종 교육참고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폄훼하는 요소들을 보완하는 한편, 자료의 논조에 있어서도 가치중립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몇 가지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통일교육의 의의일 것이다. 이는 남북문제와 통일방안을 국민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통일문제를 구별하여 바라보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젊

은 세대에게 국가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관념적으로 인식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통일교육은 한민족으로서 상생·공존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존재하는 남북문제의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재인식 시키는 방향으로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기본교재 개발

정부는 1972년 이후 매년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북한 실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왔다. 1993년 까지는 『민주통일론』으로 발간해 오다가 그 후에는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로 발간하고 있다.

2009년판 기본교재는 기본적으로 2008년판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북한 및 주변정세 등의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동북아 정세,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대남동향, 북한 군사력 변화, 시장통제 정책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2010년판 기본교재는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판의 구성 체계를 보완하면서 남북관계 전개 상황,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내용 등을 보강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남북관계 현황,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통일미래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고,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의 내용과 의미를 새로 추가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등 계획경제 강화 동향을 보완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체제의 형성, 사회통제와 인권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교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국가관과 통일관,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기본교재를 처음으로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다. 2010년에는 전년도보다 각각 2만부를 늘려 『통일문제 이해』 4만 3,000부, 『북한 이해』 4만 5,000부를 발간하여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6월 현재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35개에 이르고 있다.



2010 통일문제이해

2010 북한이해

2. 참고자료 개발

통일교육 기본교재 외에도 정부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여 왔다.

우선, 2008년에 있었던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설문, 통일부 공식자료 및 정책설명 자료 등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자료집을 발간(1,500부)하였다. 이 자료를 통일교육위원, 통일부 자문·평가단 등에 지원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교재의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교재로서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 관련 각종 질의에 대한 응답 형태로 된 참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발간해 온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50』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 발간 자료 중에서 각종 통계 수치를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재발간(1만 3,000부)하였으며, 대북정책 설명회 등 각종 행사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09년 12월까지 발간된 자료는 총 24종에 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2종을 발간하여 대학의 관련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은 독일통일 20주년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통합 등 분야별 현황과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와 노선, 전개양상 등을 담고 있다.

2009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친화적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자료 개발에 힘썼다. 또한 영상자료를 장애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막과 수화를 삽입·제작하여 전국 장애인학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보급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방’에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자료방’ 이용자 수가 2008년 보다 32% 증가된 12만 3,267명에 달하였다. 2010년에는 ‘자료방’ 메뉴를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콘서트





콘서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콘서트

06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 제1절 평화통일을 대비한 역량강화와 법·제도의 준비
-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 제3절 정책추진과 국민적 합의
-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6장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제1절 평화통일을 대비한 역량 강화와 법·제도의 준비

1. 통일업무 역량 강화 및 조직 정비

가. 통일업무 역량 확충

우리부 일반예산은 2009년 1,215억원(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제외)으로 정부 총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 중 80%는 남북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법정경비와 시설개보수 및 청사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었고, 순수 사업비는 1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합의 기반구축 및 중장기 통일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2010년도 일반예산을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42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7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최근의 변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 미래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역량 강화, 북한정세 분석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나. 조직 정비

2009년에는 경제 살리기와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기관별 조직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80명의 인력이 감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대국대과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 통일정책 및 국민통합 기능강화, 대북 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였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을 통합(14개과·팀 → 7개과·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인력부족 등 제한된 상황 하에서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상생공영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존속기간이 2009년 10월로 만료되는 상황이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당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완료와 동시에 해체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개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3통 문제 해결도 진척이 별로 없는 등 기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개성공단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개편하고, 기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수행하던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이어 받는 동시

에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 지구에 대한 개발과 지원 기능을 추가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3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률에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규정 되었다. 그간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해 온 조직이 사실상 상설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남북이 합의한 개발 지구 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통일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2009년에는 그 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협력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간 교역 대상을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고, 유명무실해진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시 방북자 중 일정한 경우 방문이 허용된 기간 내에는 별도 신고 없이 수시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정한 경

우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인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특구지역 내에서 5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액투자’로서 신고만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벌칙·과태료 대상을 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목적	주 요 내 용
법 률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상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보조금 지원자 및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남북간 직접 왕래자의 방문신고 면제근거 마련 ○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근거 마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조사권 신설 ○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
시행령	법률 위임사항 등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승인 국제행사 참석시 접촉, 외국소재 법인 취직자의 업무상 접촉 등 ○ 협력사업 신고제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내 총 투자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 업무위탁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자, 지방자치단체 등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출석 요구, 조사계획서 사전 송부 등
시행규칙	개정 법령 관련 서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명령서, 조사계획서, 등
고시 등 하위규정	5.24 조치에 따라 반출입 승인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모든 반출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전환 ○ 다만,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품 등은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품목으로 지정

또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내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단체·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규집 및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개정된 법규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5월 24일 발표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되었다.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해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모든 반출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만 개성공단의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물품등은 별도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간주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관, 검역, 대북송금 관련 관계기관 및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 및 시행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하고 5.24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3.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민간위원과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07년 11월 28일 최초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 서면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3월 10일 민간위원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2차 핵실험 등 북한이 연이어 도발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민간위원 의견수렴, 9월 24일 민간위원 검토회의, 10월 15일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3일 국정감사 시 국회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모색하고, 2010년 1월 29일 실무위원회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 2월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 및 천안함 피격사건 등 정세가 또 다시 급변함에 따라 최종안에 대한 확정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4. 교역물자관리시스템 보완

북간 교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도 1만여 개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북 반출입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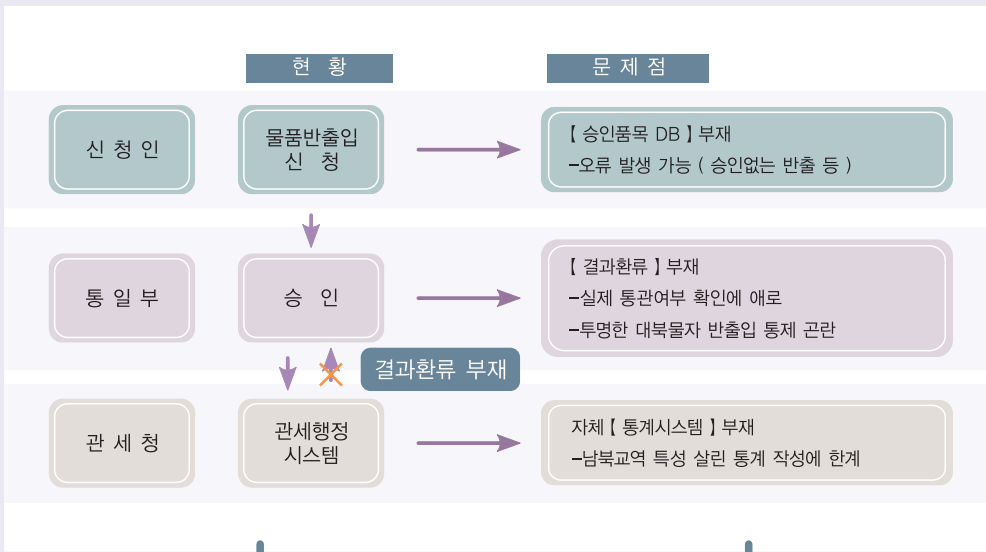
특히 국회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대북 물품 반출입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해 12월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09년 2월 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을 정비함으로써 반출·반입 승인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둘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의 무단 반출·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컴퓨터 등 재반입 조건부 물품에 대해서는 재반입 할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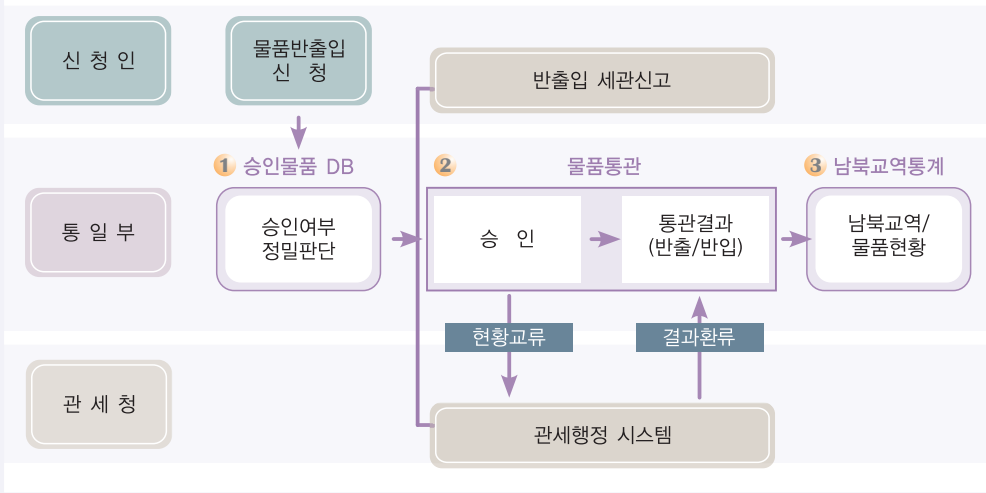
정부는 남북간 교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역물자관리 업무 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9년 5월 11일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8월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승인품목 정비, 물품 반출입 승인 및 통관정보 연계, 교역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완료되었다. 교역물자관리업무는 남북교역 관련 민원상담, 물자 반출입 승인신청 예비검토, 남북교역업체 D/B 운영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업무로서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개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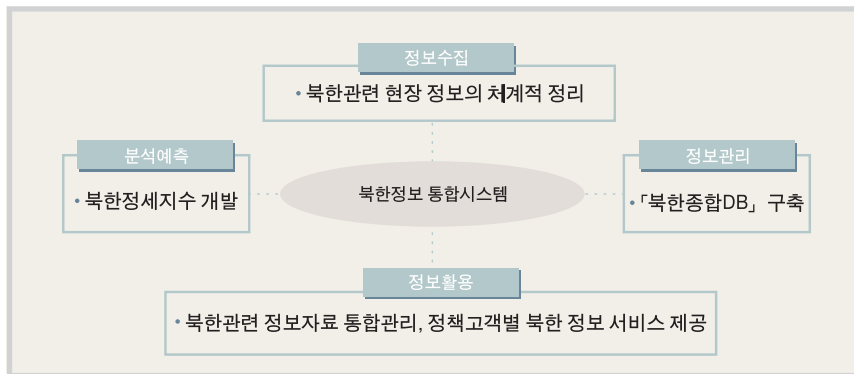
- ※ ①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이 필요한 개별승인품목을 DB로 구축
 ② 통일부 반출입 승인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③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통일부-관세청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남북간 반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교역업체에게도 HS 코드 검색, 남북교역통계 확인, 전략물자 판정업무 등의 기능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남북간 교역과정에서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되었다.

5. 북한 정보 분석시스템 강화

2009년 5월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대북 정세분석 기능이 강화되었다. 북한 및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통일부는 북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정보 분석시스템 개념도



그 일환으로 2010년 북한 종합DB 구축,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등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북한 종합DB」구축

「북한 종합DB」는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북한 자료 △북한인물 정보 등 3개 DB를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선진사례 분석과 정보화 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작업을 10월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실제 종합 DB 시스템 개발과 DB 구축 작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를 구축하게 되면 각종 북한 관련 정보자료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북한 정세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부차원에서는 대북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강화되고, 민간차원에서도 공신력 있는 북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북한정세지수 개발

정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틀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4개 부문에서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변화 추세를 예측하는 지수이다.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은 각 분야별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다수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3월말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가 개발되면 북한 정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사전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북한 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1990년대 초 이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북한을 왕래하는 민간교류가 많아지면서, 현장정보가 다양해졌지만 각 기관별로 북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대북정책이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힘들었다. 또한, 면접관련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적인 조사나, 표준화된 기법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사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북한 관련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 관련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북한 종합DB」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통일법제기반 구축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서 체결, 교류·협력관계 제·개정, 통일관련 법제정비 등 다양한 법제도 구축 수요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일법제 구축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통일 역량 기반구축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통일부는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의 첫해인 점을 감안,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통일법제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간의 통일법제 연구성과를 정리하며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우선, 통일부를 비롯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아우르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각기관의 통일법제 연구성과 및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통일법제 관련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중장기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제도 관련 정책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각종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주제 선정시에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실성있는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통일법제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법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바 있는 통일법제(북한법제 및 舊 공산권 법제 연구 포함)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 DB화하였다. 이는 관련 연구 현황과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일법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2009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통일법제 관련 연구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용역 분야에서는 사업 2년차를 맞아 개론적인 내용을 넘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독일통일 20주년 등을 계기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발간물 등 자료를 대폭 보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가. 개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12월까지 총 1만 7,984명이 2010년 6월 현재에는 약 1만 9,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입국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329	6,104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908	13,117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237	19,221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미래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의지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한다)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들을 개정하는 등 정착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영농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영농정착을 장려하고,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거주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2010년 3월 개정 정착지원법이 공포되어 2010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0년도에는 지역차원의 각종 정착지원 서비스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을 적극 촉진하고 있다.

나.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 지급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다.

2009년 3월에는 사회적응 교육기간을 기존의 8주에서 12주로 확대·개편하여 교육생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 증진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체험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자격